

6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고용구조와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일하는 65세 이상 연령층(이하 노인)의 비중이 가장 높고, 노인의 빈곤 상태도 최상위 국가군에 속함.¹⁾
 - 한국에서 일하는 노인의 비중(=고용률, 34.9%, 2021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 노인 고용률(15.0%, 2021년)과 큰 격차를 보임.
 -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20% 미만 수준인 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되는 수준임.²⁾³⁾
- 2023년 현재 노인 생산가능인구의 37.3%에 해당하는 352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일하는 노인의 증가 속도는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인의 고용률(=노인 취업자/노인 생산가능인구*100)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취업자의 취업시간을 고려한 전일제 환산 고용률(FTE고용률 : Full-Time Equivalent)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됨.
 - 노인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주4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일반적인 고용률에 비해 낮고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이후 주40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이 여전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전환된 데는 주40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율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임.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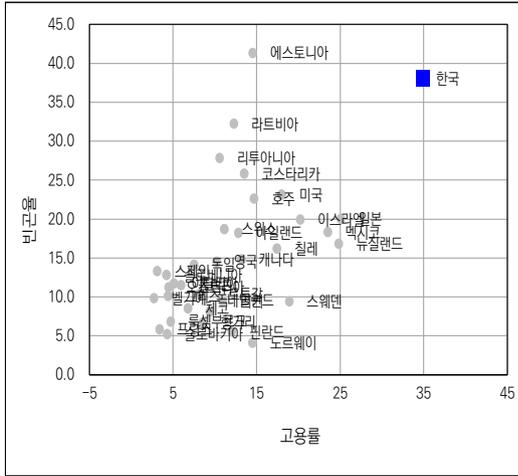
1) 특정 집단(예 : 65세 이상 노인, 청년, 여성 등)의 상대적 빈곤율은 특정 집단의 인구 중에서 빈곤선 미만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임. 빈곤선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으로 설정하였으며,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 가중치를 이용함. 보고는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소득은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하여 관련 지표들을 구함.

2) 2023년 OECD 회원국 평균 노인 고용률은 15.9%이고, 노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노인 고용률은 증가하였음.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공적이전소득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을 보완한 자료를 2020~2022년(소득기준 연도)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어 소득 관련 항목의 시계열 연속성이 제한됨. 2020·2021년에 한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급여소득이 보완된 버전과 보완되지 않은 버전을 이용할 수 있었고, 두 버전을 통해 평균소득과 소득을 이용한 지표들의 수치상 차이는 조금 있지만 추세에는 큰 변화는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고용과 소득불평등 지표를 두 기간(2017~2019년, 2020~2022년)으로 나누어 비교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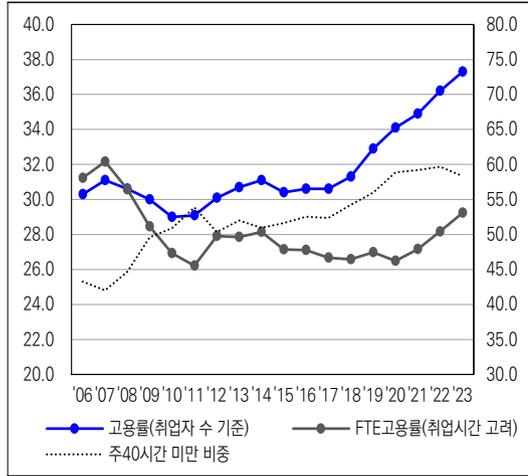
[그림 1] OECD 회원국 노인의 고용률과 상대적 빈곤율

(단위: %, 2021년)



[그림 2] 노인의 고용률과 전일제 환산 고용률 추이

(단위: %)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미만으로 빈곤선을 설정한 결과이며, 2021년 자료가 없는 국가는 이전 연도 자료로, 2021년 이후 자료가 있는 국가는 최근 연도로 대체함(한국은 2022년 기준임).

2) 일반적으로 고용률은 특정 집단의 인구에서 특정 집단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취업자의 취업 시간을 고려한 고용률임.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주된 일자리와 부업 일자리를 포함한 총 취업시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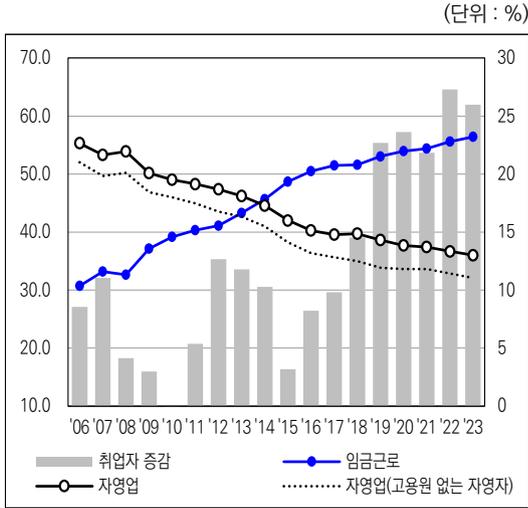
자료: OECD, <https://data-explorer.oecd.org/>;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임금근로자 주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라 임시일용직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도 10만 명 내외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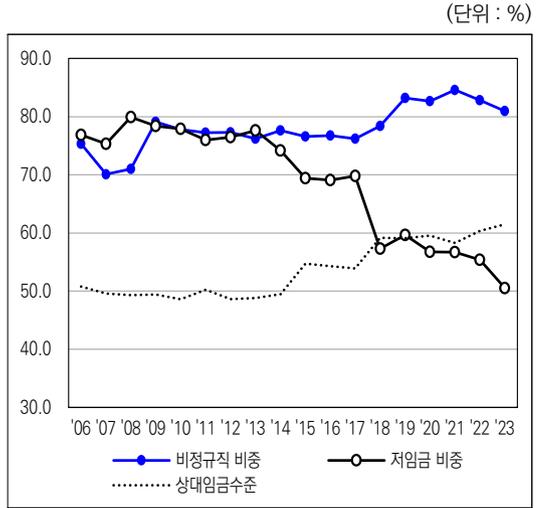
- 반면 도매 및 소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노인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증가함(2006년 30.7%→2023년 56.4%).
- 노인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최근에는 상용-비정규직보다 상용-정규직 증가폭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노인 임금근로자의 상대임금수준(65세 미만 임금근로자 시간당 임금=100.0)은 50%대에서 횡보하다가 2014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임.
- 다만, 일하는 노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시일용직(36.0%, 2023년)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강한 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 산업의 노인 임시일용직은 상대적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상대임금수준(노인 임시일용직 시간당 임금=100.0)도 감소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4) 노인 취업자 증가분에서 주40시간 미만 취업자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90.3%에서 2023년 41.4%로 감소함.

[그림 3] 노인 취업자의 고용구조



[그림 4] 노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



주: 1) 저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 중윗값의 2/3 미만에서 해당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함.
 2) 상대임금수준은 65세 미만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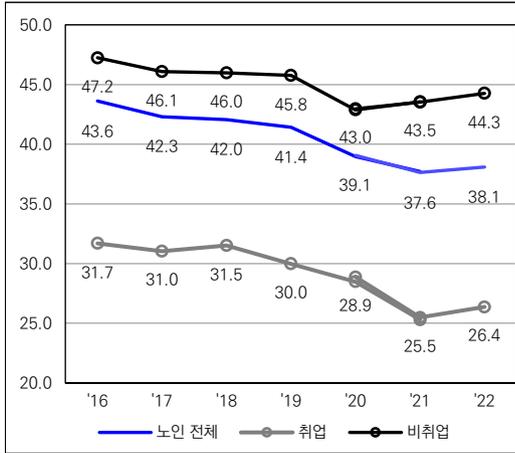
○ 노인의 고용구조가 자영업 중심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일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일하는 노인의 빈곤 상태(소득 기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인은 매년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⁵⁾, 일하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는 추세임(2020년 28.9% → 2022년 26.4%).
- 하지만 일을 원하는 노인 10명 중 6명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응답은 노인의 상당수가 생계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음.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중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다는 노인의 비중(2020년 61.9% → 2023년 64.2%, 노인실태조사)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비의 대부분을 본인과 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중도 노인의 6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노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2년 기간 평균 5.3% 증가한 가운데 노인 취업자는 동기간 8.5% 증가함. 노인 취업자의 증감을 2017·2019년과 2020·2022년으로 나누어 요인분해(=고용률효과+인구효과)한 결과, 두 기간 모두 노인 취업자 증감에 대한 인구효과 기여도가 컸으며, 특히 2020·2022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65~69세 연령층에 진입하면서 이들 연령층 취업자 증감의 70% 이상이 인구효과로 설명됨(취업자 증감의 요인분해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2017년)의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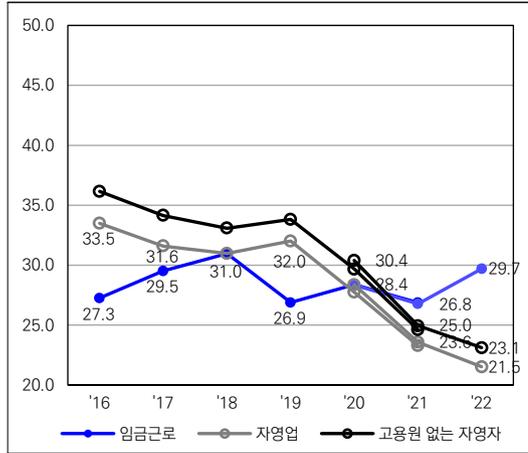
[그림 5]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취업·비취업)

(단위: %)



[그림 6] 노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상대적 빈곤율

(단위: %)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비중임. 취업은 65세 노인 중 취업 상태인 경우, 비취업은 취업이 아닌 상태(장애인이면서 비취업 상태는 제외)임.
 2)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취업·비취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상용직·임시일용직·고용원 있는 자영업·고용원 없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기타 종사자(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등)는 취업, 무직은 비취업으로 간주함. 자영업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과 고용원 없는 자영자를 의미함.
 3)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계열 연속성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2020~2021년 자료를 통해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급여소득을 반영한 자료와 반영하지 않은 자료를 비교했을 때 추세는 동일한 흐름으로 확인됨.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노인 중 임금근로자가 절반 이상(53.2%, 2022년)이고, 일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빈곤 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노인은 증가함.

-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이고, 코로나 19 이후인 2020·2022년에는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2020년 28.4%→2022년 29.7%).
- 반면 자영업(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자)의 빈곤율은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보다 높았던 자영업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이후 역전됨.

○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을 기점으로 분석기간(2017·2019년, 2020·2022년)을 나누어 일하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비교한 결과, 두 기간 모두 일하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구성비 감소와 이들의 빈곤율 감소가 일하는 노인의 전체 빈곤율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⁶⁾

6) 빈곤율 변화(ΔP)는 집단의 구성비 변화가 전체 빈곤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첫째 항, 구성효과), 각 집단의 빈곤율 변화가 전체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둘째 항, 빈곤율효과), 오차항(셋째 항)으로 분해할 수 있음(빈곤율 변화의 요인

- 일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두 기간 동안 각각 1.06%p, 2.51%p 감소함. 일하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를 종사상 지위별로 요인분해한 결과(표 1 참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구성비 감소효과(-0.36%p, -1.08%p)와 이들의 빈곤율 감소효과(-0.13%p, -2.65%p)가 일하는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가 컸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임시일용직의 구성비 증가는 두 기간 모두 일하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를 제한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일하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요인분해(2017·2019년, 2020·2022년)

(단위 : %p)

	2017·2019년				2020·2022년			
	전 체	구성 효과	빈곤율 효과	오차 효과	전 체	구성 효과	빈곤율 효과	오차 효과
노인 취업 상태	-1.06	0.74	-1.59	-0.21	-2.51	-0.42	-2.57	0.48
상용직	-0.07	-0.02	-0.05	0.00	0.19	0.17	0.02	0.00
임시일용직	-0.20	1.55	-1.54	-0.20	2.16	1.14	0.93	0.08
고용원 있는 자영업	-0.04	-0.06	0.03	-0.01	-0.06	-0.01	-0.05	0.01
고용원 없는 자영업	-0.48	-0.36	-0.13	0.00	-3.48	-1.08	-2.65	0.26
무급가족종사자	-0.28	-0.34	0.07	-0.01	-1.32	-0.63	-0.82	0.12
기타 종사자	-0.01	-0.02	0.03	0.00	0.00	-0.01	0.00	0.00

주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실질) 기준이며, 취업 상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상대적 빈곤율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지표인 소득 5분위배율을 보더라도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노인의 소득불평등은 심화됨.

- 임시일용직의 소득 5분위배율(2020·2022년)은 저소득층에 속하는 1분위 소득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의 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소득불평등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자의 소득 5분위배율은 1분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커 소득불평등이 개선됨.⁷⁾

$$\text{분해방법은 } (\Delta P = P_t - P_s = \sum_j \Delta S_j \times P_s + \sum_j S_s \times \Delta P_j + \sum_j \Delta S_j \times \Delta P_j).$$

7)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년 연동표본으로 실시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두 기간 조사된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 상태의 이동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자→임시일용직' 이동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자→무직(비취업)' 이동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영세한 도매 및 소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비중이 감소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자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고, 이들 영세한 고용원 없는 자영자가 휴·폐업 등을 결정하고 임시일용직으로 이동하였다면

〈표 2〉 일하는 노인의 소득 5분위배율과 분위별 소득증가율(취업·임시일용직·고용원 없는 자영자)

(단위: 배, %, 기간 평균)

	취업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자	
	2017·2019	2020·2022	2017·2019	2020·2022	2017·2019	2020·2022
소득 5분위배율	6.90→5.93	5.57→5.76	5.67→4.92	4.36→4.88	6.30→5.57	5.20→5.07
1분위	11.5	9.1	14.8	5.7	11.2	14.1
2분위	6.2	13.6	12.2	8.0	6.1	17.4
3분위	6.1	13.0	9.5	9.5	4.1	16.4
4분위	5.6	12.4	9.1	11.0	4.2	14.4
5분위	3.4	10.9	6.9	11.9	4.6	12.7

주: 소득 5분위배율은 노인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실질)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노인이 포함되도록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 일하는 노인의 고용구조가 영세한 도매 및 소매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생계형 자영자는 줄고, 임시일용직과 상용직이 증가한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변하고, 일하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됨.

– 다만, 공공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증가하고 있고, 임시일용직의 증가는 일하는 노인의 빈곤율 감소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생산가능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일하는 노인, 특히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일을 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하겠다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와 기간을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정부재정지원 노인일자리의 상당수가 '월 30시간 29만 원'에 해당하는 공익형 사업이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은 복지 정책 차원의 의미가 큼.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경직성을 반영하여 정년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적절한 재교육훈련 시스템과 숙련매칭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KLI**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임시일용직의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임.